



시민과 함께 협치를 말하다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시민설명회

일시 2018. 12. 6. [목] 14:00

장소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 모두발언 (민관협치 추진경과)

- ‘기본계획 안에 담긴 더 깊고 넓은 협치서울 비전’ 5
김병권 | 서울특별시 협치자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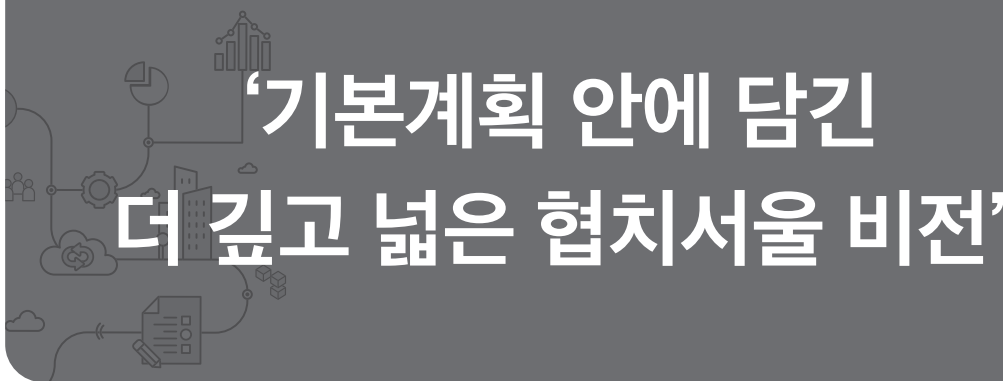
☐ 협치 우수사례

- 지역혁신부문** 9
 - 영등포구 민관협치사례
유은옥 | 영등포구 협치회의위원
- 청년부문** 17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미래’
김희성 | 청년명예시장
- 시정혁신부문** 31
 - 시민의 눈으로 성평등 정책 만들기
박신연숙 | 풀뿌리여성네트워크바람
- 마을혁신부문** 45
 - 시흥4동 주민자치회와 시흥4동 행정과의 협치사례
백기성 | 시흥4동 주민자치회장

- ☐ 서울시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53
오수길 | 서울협치협의회 부의장

시민과 함께 협치를 말하다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시민설명회

[모두발언]



김병권 | 서울특별시 협치자문관

기본계획 안에 담긴 더 깊고 넓은 협치 서울 비전

김병권(서울특별시 협치자문관)

“‘혁신’과 ‘협치’는 서울시정의 두 낱개입니다. 시민을 시장으로 모시는 협치가 시정의 기반이 되었고, 혁신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시정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민과 관이 공동으로 시 정책을 제안·결정·집행·평가하며 완전히 함께하는 체제, 시민이 시장이 되는 ‘협치 서울’을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

지난 민선 5,6기 시정을 관통해온 정책원리인 혁신과 협치에 대해 지난 2017년 12월에 박원순 시장이 다시금 강조한 대목입니다. 서울 협치 기본계획안은 서울시 시정의 변함없는 하나의 축을 더 전망성 있게 긴 안목에서 설계하고 더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자, 1년 넘는 시간동안 협치전략분과를 주축으로 서울시 협치에 참여한 수많은 관계자들의 지혜가 담겨진 계획안입니다.

협치전략분과 분과장님과 위원들은 그 동안의 서울시 협치경험과 성과를 집대성하는 한편, 서울시에서 협치에 관심을 가지고 협치 네트워크에 참여해온 많은 시민과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기에 서울연구원이 좀 더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뒷받침이 될 연구 활동을 통해 협치 기본계획의 틀과 내용을 채우는데 중요한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협치추진단과 민관협력담당관은 여론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협치 정책 추진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해나갔습니다. 협치기본계획 수립의 큰 뼈대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지난 6월 13일 전국의

지방정부를 새롭게 구성하는 지방선거가 있었고, 이후 민선 7기 서울시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민선 7기의 공약 내용 가운데 협치 공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여갔습니다.

이러한 집합적인 지혜와 노력이 모아진 결과, 향후 민선 7기 서울 협치시정의 비전으로서 “시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협치,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비전을 확정하고, 세 가지 큰 틀로 기본계획의 세부전략과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 시정차원에서의 협치제도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 25개 자치구와 지역에서의 협치모델을 완성하며, △ 협치의 파트너인 서울시민의 협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로서 광역과 지역에서, 그리고 행정과 민간에서 서울시 협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함께 가야 할 목표와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정책 청사진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더 넓고 더 깊고, 더 오래가는 변화’라는 시정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서울시의 더 큰 변화는 오직 더 많은 서울시민의 더 풍부한 지혜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더 다양하고 많은 시민들이 424개 행정동에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더 많은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과정 그 자체가 협치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치는 더 큰 변화를 위한 시민과 행정의 지혜를 합치는 과정입니다.

민선 7기 더 큰 변화를 위해 시민과 행정이 지혜를 모으는 전략이 바로 이번에 준비한 협치 기본계획이 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협치를 말하다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시민설명회

[협치 우수사례]

지역혁신부문

영등포구 민관협치사례

유은옥 | 영등포구 협치회의위원



영등포구 민관협치사례



협치 (協治)
: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

공감 (共感)

: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협치의 단계





영등포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의제발굴단계부터 민관이 함께 소통하였습니다.



주말설명회, 공청회

분과실무협의회
협치분과
의제도출
2017.11월 ~ 2018.4월 [6개월]



분과실무협의회
14회



협치분과
36회

도시재생, 지역특화, 생활밀착, 복지, 다문화, 청년분과



소규모공론장
6회



거리공론장 참여인원
419명

협치분과 · 사업부서

소규모공론장

2018. 4월 ~ 5월 [3개월]



민관심의단
영등포구협치회의
서울시협의조정

협치사업심의

2018. 5월 ~ 6월 [2개월]



2019. 영등포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며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협치의 단계



시민과 함께 협치를 말한다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시민설명회

[협치 우수사례]

청년부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미래'

김희성 | 청년명예시장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 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미래’

서울특별시 청년명예시장
(사)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실행위원회 실행위원
김 희 성

1. 서울시 청년정책의 시작,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는 지난 2013년 1기가 구성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당사자가 직접 정책을 분석·개발하여 대안을 제시하면 서울시가 이를 검토·실행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 당시 청정넷에는 당초 목표 인원인 100명을 훌쩍 넘어 249명의 청년들이 참여를 신청하여 ‘청년정책위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이렇게 모인 청년들은 13개의 정책데이블(팀)이 구성되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 30여개의 정책아이디어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디어들은 토론회와 조정을 통해 20개의 정책제안으로 추려졌으며, 이렇게 다듬어진 정책들은 서울시 ‘청책토론회’¹⁾를 통해 박원순 시장 및 시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제안되었다.

[표 1] 1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2013) 제안 정책 목록

연번	제안명	소관부서
1	서울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센터 설치.운영	일 자 리 정 책 과
2	청년단체 활성화 및 네트워크 거점공간 조성	일 자 리 정 책 과
3	청년주택협동조합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시범사업	임 대 주 택 과
4	원룸형 주택 관리운영 혁신	공 동 주 택 과
5	1·2인 가구 공동체활성화 지원	공 동 주 택 과
6	안전한 고시원 가이드라인 제정	건 축 기 획 과
7	지하방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공 동 주 택 과
8	청년 신용회복 및 긴급생활 안정자금 이자부담금 지원	소 상 공 인 지 원 과
9	서울시 청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복 지 정 책 과
10	서울시 청년 행복통장 시범사업	희 망 복 지 지 원 과
11	민생침해근절 대책 보완	민 생 경 제 과
12	미래예술인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지원	문 화 정 책 과 (문 화 예 술 과)
13	‘서울 미래유산지킴이’ 운영	문 화 정 책 과
14	미래예술인 공작실 공간활용 지원	문 화 정 책 과
15	건강한 청년 서울 프로젝트	건 강 증 진 과
16	마을로 청년활동가 인력운영 확대	마 을 공 동 체 담 당 관
17	마을청년 작업실(Co-working place) 구축	마 을 공 동 체 담 당 관
18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을 위한 ‘청년정책과’ 신설	일 자 리 정 책 과
19	영.유아 보육을 위한 교육공동체 운영	출 산 육 아 담 당 관
20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일 자 리 정 책 과

1) 청책토론회는 사회적 이슈 및 정책현안에 대해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당사자가 정책제안을 하면 서울시가 이를 수렴하여 정책으로 반영하는 토론회 형식의 민관협력 플랫폼이다.

- 청정넷은 특정한 주제 혹은 정책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커뮤니티(팀, 모임, 분과 등)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이다. 각 커뮤니티들은 각기 다른 구성원, 활동방식, 문제인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활동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정참여, 청년문제 해결 등의 미션으로 연결되어 청정넷이라는 하나의 네트워크에 소속된 구성원이기도 하다.
- 이는 기존에 행정부와 거버넌스를 진행해왔던 노동조합, 기업, NGO, 직능단체 등 단일한 목표 아래 조직된 결사체들과는 매우 다른 지점이다. 소위 ‘청년’이라는 세대가 대단히 다양한 속성과 조건을 가진 수많은 개인들로 구성된 ‘비균질적’인 집단이면서도, 다른 세대 및 영역과 달리 미조직된 집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4기(2017) 구성 및 조직도



- 그리고 이러한 커뮤니티와 이에 참여한 청년들의 활동지원, 시정참여를 위한 교육, 정책제안을 위한 자문 및 연구, 당사자와 시 집행부 사이의 조정 및 소통, 지자체 및 청년단체와의 협력 등을 전담하는 운영지원단(운영사무국+비상근 자원활동가)과 정책지원단이 구성되어 청정넷이라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2. 참여에서 협치로, 제안에서 발의로, ‘2015 서울청년의회’

- 2013년 1기 서울청정넷의 활동이 마무리 된 이후, 2014년 9월부터 시작된 2기 서울청정넷은 지난 시기 진행된 청년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들의 제안이 단순히 제안의 위치에서 더 진전되기 어려운 현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 또한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구조가 만들어졌으나 여전히 정책의 근간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일한 수단에 기대고 있었다. 청년문제가 주거, 부채, 공간, 관계 등 삶의 전반에 걸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만 거의 모든 역량이 투입되면서 정책과 당사자 사이의 괴리 또한 크게 벌어진 상황이었다.
-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민선 6기 서울청정넷과 서울시는 ‘청년정책의 방향전환’이라는 기조 아래 기존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을 종합적인 사회정책으로 서울시 청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 시의회, 서울시의 삼각 거버넌스를 통해 2015년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서울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 발표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그림 2] 서울시 청년정책종합계획 ‘2020 서울형 청년보장’ (2015)



- 이러한 성과의 기반에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청정넷이 매해 개최하는 ‘서울청년의회’가 자리하고 있다. 형성기에 놓여 있던 청년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개최된 서울청년의회를 통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 공공임대주택, 청년 깡이어, 청년공간 등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들이 제안되었다. 또한 기존 정책의 개선 및 신규 정책과제 발굴 또한 서울청년의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 2015년 서울청정넷과 서울시가 공동주최 하였으나, 2016-17년에는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위가, 2018년에는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하여 개최되었다. 서울시의회가 청년정책의 조력자로서 의회 고유의 권한을 청년에게 과감히 보장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 2016 서울청정넷_ ‘청년시민’ 이 등장하다!
- 2016 서울청정넷 3기는 총 376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2기 청정넷과 비교하였을 때, 3기 청정넷은 다루는 의제의 폭을 넓히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기 위한 문턱 낮은 시민참여의 장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 서울시 정책 범주에 따라 나뉘어진 카테고리에 참여자들이 선택하여 이를 중심으로 분과를 구성하는 방식에서, 다양한 청년문제와 이슈를 주제로 모임지기들이 먼저 모임을 구성하면, 참여자들이 여기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모임을 구성하였다.
- 이러한 흐름에 따라 2기 서울청정넷에 비하면 작은 규모의 많은 모임들이 운영되었고, 커뮤니티 성격의 모임부터 정책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모임까지 이전에 비해 다양한 유형의 모임들이 구성되었다.
- 청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고, 다양한 영역과 의제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결합하면서 2016 서울청년의회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만 한 의제에서 미세먼지, 자전거, 장애인, 식생활 등 다루는 영역이 ‘일반정책’ 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청년 또한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 으로서 다양한 의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시도였다.
- 또한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던 ‘청년수당’ 이 하나의 분과로 구성되어 신지에 청년의원이 대표연설을 진행하였고, 청년정책이 당사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성을 존중하는 원리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빚어진 편견과 불신을 딛고 나아가야 함을 선언하였다.

3. 2017 서울청정넷, 변화를 감각하는 청년들의 장

- 2017년에 이르면 청년정책이 어느 정도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고, 주요 청년정책들 또한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정책이 사업화 되고, 집행이 되면서 실제로 제안했던

취지와 다른 형태로 추진되거나, 사업 시행을 두고 청년 당사자들이 경쟁을 하게 되거나 높은 진입 장벽으로 사업에서 배제되는 사례들도 발생하였다.

-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청년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관점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채, 제도만 복제되는 데에 있었다. 2017 서울청년의회에서는 ‘일자리를 넘어 삶으로, 숫자를 넘어 자존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이 더 많은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며, 기존의 제도와 관성을 벗어나 달라지고 있는 현실에 맞춘 집행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 그래서 17년도 서울청년의회에서는 기존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과 더불어 새로이 등장한 청년들의 필요와 사각지대로 남아 다뤄지지 않고 있던 영역에 대한 접근을 통해 청년 갭이어, 청년 마음건강 지원정책을 제안하였다.

[표 2] 제3회 서울청년의회(2017) 10대 정책제안

연번	분과	사업명	담당부서
1.	청년수당	서울형 청년수당 전국화 및 니트청년 특화 대책 마련	청년정책과
2-1.	교통	서울시 대중교통 조조할인 시간대 확대	교통정책과
2-2.	교통	청년 1인가구 건강권 증진사업 도입	버스정책과
3-1.	장애인	장애인 재난안전대응 매뉴얼 개선 및 접근성 강화	재난대응과
3-2.	장애인	장애시민도 함께하는 재난대응 교육·훈련 강화	재난대응과
4	마음건강	청년 마음건강 회복 프로젝트 추진	청년정책과
5.	일자리	청년일자리 사업 특별점검 및 이해당사자 협의체 구성	일자리정책과
6-1.	부채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	민생경제과
6-2.	부채	부채위기청년 긴급생활지원 사업	희망복지지원과
6-3.	부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개선	복지정책과
6-4.	부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 확대	청년정책과
7	시민교육	청년종합생활상담 오픈 더 도어 프로젝트 추진	청년정책과
8-1.	주거	서울시-청년, 중앙정부에 청년주거권 보장 TF 제안	주택정책과
8-2.	주거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 개선	주택정책과
8-3.	주거	청년주거복지 상담교육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기능 강화	주택정책과
9	갭이어	서울형 청년 갭이어(GAP-YEAR) 지원 사업	청년정책과
10	대표연설	2018 서울시 청년정책의 발전을 위한 주요과제 제안	청년정책과

- 2017 서울청년주간 또한 이러한 문제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준비되고 개최되었다. ‘변화를 감각하다 : 당연한 것들에 대한 문제인식’ 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청년문제에 대해 여전히 존재하는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고,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또한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서로 공유하고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장도 만들고자 하였다.

- 그래서 장소 또한 그간 서울혁신파크에서 진행되었으나, 서울시청 무교로에서 진행하였다. 청정넷 모임별 13개 프로젝트와 더불어 청년단체 및 개인 200여 팀이 참여하였고, 추산 10,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 청년정책에 대한 대시민 홍보와 더불어서 청년당사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기에 다양한 청년단체 및 개인, 커뮤니티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계기였다.

[표 3] 제3회 서울청년주간(2017)

청년활동박람회 현장	청년활동박람회 현장
청년활동박람회 청정넷 일자리 모임 부스	청년활동박람회 토크 버스킹
서울청년정책 홍보 전시물	청년활동박람회 마켓 부스 <Youth Brand Factory >

4. 한국사회 개혁의 또 다른 이름, ‘청년정책’

- 2018 서울청정넷은 분과구성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그간 의제 중심의 분과구성에서 현재 청년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한 ‘청년자립’ 세션, 그리고 정책이라는 틀로는 담기지 않으나 청년 당사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향후 우리사회 미래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들을 논의하는 ‘청년공존’ 세션으로 대 주제를 나누고 이 안에서 세부 분과들을 구성한 것이다.

2018 서울청년청년정책네트워크 분과구성 (홈페이지 참조)



청년자립

<p>일자리분과: 청.사.진 장년 프로젝트 투자사업 개선과 진단 청 세 진은 청년프로젝트투자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청년프로젝트투자사업은 자살생각 시대와 높은 청년실업률과 과도한 경쟁 속에서 저소득층 청년들을 도우려고 있는 청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으로, 해초와 취지대로 청년일시자에게 가할 수 있도록 하려고 있는지, 적용하기 위한 개선안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주사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p>	<p>일자리분과: 진학하지 않아도 괜찮아 비전직청년대상 기술교육원 정책 개선 모임 진학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진학청년과 비전직청년의 구분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합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숙련직 기회, 사회적 자본 획득의 기회로부터 배제한 비전직청년들에게 필요한 기술교육과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서울시 기술교육원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을 모니터링하여 정책제언을 추진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p>	<p>살자리분과 서울에서 청년 세입자로 살아남기 프로젝트 살자리분과는 은자가 아닌 대안이 있는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직접 당사자의 입장에서 주거정책을 설계하고 제안하며, 실용성 있는 정책집행을 위해 지원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요구합니다.</p>
<p>살자리: 캠퍼서분과 나의 Gap year에 Get ear해봐! : 나의 걸이마에 귀를 기울여봐! 캠퍼서분과는 청년의 다양한 삶의 속도와 방향의 인간성은 사회를 지탱합니다. 우리사회의 청년들이 스스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재발견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함께 시행예정인 관공생계적 교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청년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p>	<p>살자리: 문화분과 청년 예술인의 살자리 문화분과는 청년문화예술인의 살자리를 고민하는 분과입니다. 청년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주사하여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것이 문화분과의 과제입니다.</p>	<p>살자리: 부채분과 빚에서 벗어나 부채분과는 큰 해로운 걱정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빚을 속에서 생활경제와 맞춤형 정책 등을 모니터링하고, 청년 청년들 도울러 제안합니다.</p>
<p>놀자리분과 놀자리분과는 청년들이 문화와 필요로 하는 청년공간이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2030 청년들이 직접 청년공간을 만들어내며 더 나은 청년공간을 생각하고 설계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p>	<p>시민참여행동분과: 시민참여확대 시민참여행동분과는 청년시민이 사회에 참여하여 청년의 삶에 가닿는 정책이 설계되고 시행될 수 있다는 믿음이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실제 사회적 주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청년들의 도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p>	

청년공존

<p>장애안권분과 MOVING FREE 장애안권분과는 장애청년이 존중받는 자유롭고 건강한 도시를 지향합니다.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나누고 자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p>	<p>성평등 분과 성평등분과는 폭정한 성차별, 성차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꿈꿉니다. 이를 위해 성평등분과에서는 성평등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성평등과 도시가 갖춰야 할 가치를 점검해나가고자 합니다.</p>	<p>건강 분과 건강분과는 청년의 건강이 존중받는 도시를 지향합니다. 청년건강을 개인에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것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드립니다. 청년이 어떤 이유를 사유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함께 청년이 건강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p>
<p>자연/환경/생태 분과 자연환경/생태분과는 일상에서 가능한 실천행동을 제시하여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추구합니다. 청년들의 환경의식수준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이슈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도울려고 실천적수준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합니다.</p>	<p>다양성 분과 다양성분과는 청년의 다양한 삶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활동, 다양한 욕구, 다양한 정체성에 그대로 인정받는 사회를 위한 활동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p>	

○ 2018 서울청년의회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준비되었다. 대표연설에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차해영 운영위원장은 “확일성에 대한 거부, 권위주의에 대한 반감, 여유와 자족에 뿌리를 둔 스피라이프, 프리랜서로 상징되는 직업관의 변화 등 전통적인 시선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관점들이 청년세대의 삶에는 일상으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기존의 사회와 청년들 사이의 괴리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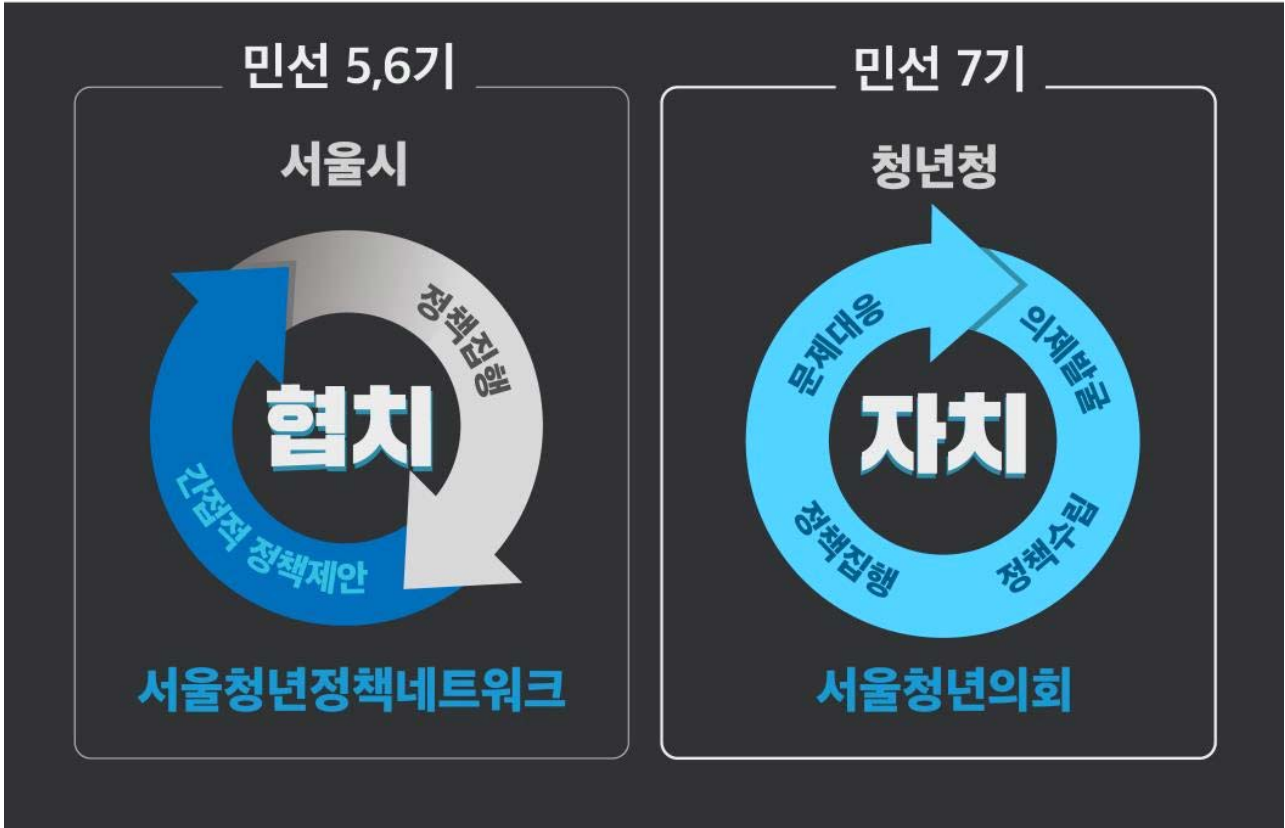
[표 4] 제4회 서울청년의회(2018) 10대 정책제안

번호	분과	제안 요지	담당부서
			실국/과
1	기조연설	“다른 차원을 여는 이야기” - 변화를 넘어 진화로 도약하는 청년정책 - 서울 청년정책 5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진단 - 다른 차원의 전망 : 정부혁신, 불평등 해소, 청년자치기반의 구축	-
2	성평등	“안심을 넘어 평등으로” - 성평등 서울을 위한 정책 제안 1) 여성 안전을 위한 도시 시설 개선 및 인프라 확충 2) 성평등 도시 실현을 위한 성평등 교육 확대 및 시민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3) 성평등 공동체 지원사업 확대로 관계 기반 안심 서울 구현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3	일자리	“진학하지 않아도 괜찮아” - 청년일자리 정책의 혁신과제 제안 1) 청년투자 프로젝트 사업 지원기준 재설계 2) 비진학 청년 일자리 예산,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의 20%까지 확대 3) 비진학 훈련생 대상 차별 없는 훈련수당 지급 4) 비진학 청년 직업훈련 사업단 신설 및 청년 운영권 부여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4	장애인권	“당신은 버스 안의 휠체어를 본 적이 있나요?” -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 1) 장애인 승객 탑승 의사 알림 시스템 도입 2) 장애인 승객 탑승을 위한 버스 배차체계 개선 : 저상-일반 버스 규칙 배차 3) 버스 기사 대상 장애인 응대, 저상버스 설비사용 관한 교육 강화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5	놀자리	“참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네” - 서울시 청년공간 활성화 방안 1) 무중력시대 홍보 총력 및 온오프라인 접근성 제고 2) 무중력시대 내 청년정책 및 지원정보 제공 확대 3) 청년의 관계망 형성을 위한 가벼운 대화와 만남 프로그램 확대 4) 청년공간 추진 목표, '조상'에서 '활성화로 발전, '이용자 운영 참여' 확대	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6	설자리 (문화)	“문경의 꿈” - 서울 청년예술인 지원 정책의 혁신 방향 1) 서울청년예술단 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규모 확대 2) 최초예술지원사업 대상 청년/일반 분리로 지원 혼선 개선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7	살자리 (주거)	“서울에,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집은 없다.” - 청년의 주거독립 보장 정책 제안 1) 역세권 전체 공급 물량 중 청년 현실 반영한 공공임대 및 특별공급 물량 확대 2) 청년임차보증금/월세지원 제도 개선 및 신설로 주거비 부담 경감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8	공존도시	“모두가 존중받는 서울을 위한 제안 - 공존도시 서울을 위한 4개년 프로젝트 1) 탈권위와 다양성 존중을 위한 시민참여 캠페인 추진 2) 위원회-OFF 제도 도입 및 소통/갈등조정 담당 조직 역할 확대 3) 서울공존주간 개최를 통한 공감과 존중 문화 확산	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9	지역청년 발언	“서울과 지역의 청년정책, 물길은 트고 맑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 청년정책과 지역자원의 환류 제안 - 청년정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전달에서 정책환류로의 전환 - 튼튼한 청년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청년교류 방안 모색	-
10	참여확대	“청년을 더하면 서울이 더 좋아집니다” - 미래대응시정, 세대균형시정 도입 1) 서울시 각종 위원회 및 산하기관 청년참여 15% 목표제 도입 2) 미래대응시정, 세대균형시정으로 청년정책 목표와 범위 확대 3) 청년 대상 지원사업 각종 심사 및 선정 기준 개선	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5. 신뢰와 성장의 공간, 청년 거버넌스

- 서울의 청년 거버넌스는 IMF 이래로 경직되고 획일화된 고용창출 중심의 청년정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청년의 참여와 요구에서 시작되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전문가나 행정 주도가 아닌 당사자인 청년들과의 끊임없는 협력과 갈등의 과정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 여전히 규모의 한계는 존재하지만 당사자들이 함께 제안했던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기본조례 제정,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갭이어, 청년공간조성, 구직지원 프로그램 등의 정책은 향후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거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 및 시행예정 중이다.
- 민관협력에 있어서도 거버넌스에 참여했던 청년들은 이러한 활동에 계속 참여하는 동기로 1)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논의와 활동이 가능한 ‘안전한 공간’의 제공 2) 참여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확인하며 얻는 효능감이라는 크게 2가지를 말하였다.
- 이러한 경험은 그 자체로도 참여한 당사자에게 시민으로 성장하는 매우 유의미한 계기를 제공한다.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정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나 냉소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참여하는 것은 공공 및 사회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 이에 더해, 단순한 제안의 역할을 넘어서서 집행되는 사업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보다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안한 내용에 대한 책임성 또한 일정 부분 나누어 가지게 된다.
-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의 청년 거버넌스는 ‘청년자치정부’ 라는 다시한번 유례 없는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적극적인 제안자와 수용적인 집행부라는 관계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권한의 분배와 결정, 책임지는 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간 서울청정넷이 민-관 협력을 통해 축적해온 성과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의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청년들이 함께하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필수적인 것은 분명하다. 지난 시기 청년문제를 풀기위해 그랬던 것처럼, 민과 관의 당사자들이 둘러 앉아 이야기를 시작할 때, 문제의 해결 또한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청년정책 추진체계



청년자치정부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청년이 - 결정하고 서울시가 -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1 시장 직속 청년정책 전담 조직 청년청
민관협력 시정운영 위한 개방형 직위제의 청년청장

2 더 넓고 깊은 참여, 서울청년의회
4회째인 서울청년의회, 청년들의 더 넓고, 더 깊은 참여의 장으로 확대

**서울
청년의회**
민간 거버넌스

확대 강화

- 1 **운영** 연 1회
의회 개최 → **상설화**
- 2 **역할** 간접적
정책제안 → **직접적
시민참여**
예산 편성 및 협의 등
- 3 **참여
범위** 청년정책 → **모든 정책**

청년청
행정 집행조직

신설

- 1 **규모** 4팀 → 7팀
- 2 **위상** 서울특별시
직속 기구로 설립
- 3 **운영
방식** 민관 협력 기반
집행기관

시민과 함께 협치를 말한다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시민설명회

[협치 우수사례]



시정혁신부문

시민의 눈으로
성평등 정책 만들기

박신연숙 | 풀뿌리여성네트워크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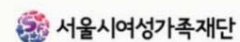
시민의 눈으로 성평등 정책 만들기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활동 -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박신연숙

시민의 눈으로 성평등 정책 만들기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젠더거버넌스 활동 -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활동 사례

: 2017~2018 현재

2018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선포식



2017.12. 젠더거버넌스 한마당 2018.3. 젠더거버넌스 선포식



2018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선포식



2018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 선포식

2018 젠더거버넌스를 위한 우리의 다짐 (2018.03.28)

2018년 대한민국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젠더 폭풍의 한가운데 있다. 이를 계기로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대한 사회적 갈망이 그 어느 시기보다 증만하다. 젠더거버넌스를 통해 시민과 행정은 성 인지 관점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 평가하는 전 과정에 소통하고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2018 젠더거버넌스는 성평등 정책의 주체로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안 도출로 서울시정의 성 인지성을 높이고 성 평등 정책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에 **2018 젠더거버넌스가 진정한 협치의 출발점이 되도록 시민과 행정이 함께 적극 협력**한다.

'2018 젠더거버넌스 우리의 다짐'은 이러한 과제와 목표를 담아 성 평등 서울로 한걸음 나아가기 위한 **시민과 행정 공동의 약속**이다.

2018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 선포식

1. 성 평등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해 지역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여성주의로 물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 성장

우리가 젠더거버넌스 활동의 전문가임을 자각하고 성 인지 감수성과 성 평등 정책에 대해 함께 배우고 나눌 것이다.

3. 소통

시민과 행정이 함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하며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대화할 것이다.

4. 확장

지역사회에 성 평등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의 활동을 시민들과 나누고 꾸준히 우리의 목소리를 더 높일 것이다.

5. 변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활동이 사회를 바꾸는 씨앗이 된다는 믿음으로 즐겁게 활동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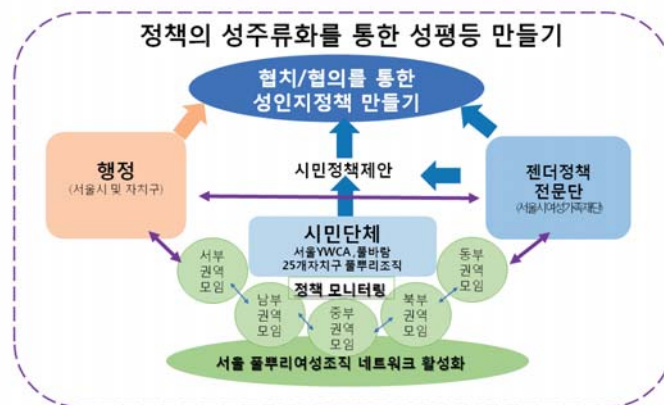
2018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 선포식

◆ 선포식 : '젠더거버넌스'는 시민과 행정의 공동행동임을 공유

(‘선포식’ 자료집 중에서)

‘젠더거버넌스’는 성인지 관점으로 시민과 행정이 **공동**으로

정책을 점검 평가하여 개선하는 **과정**



2018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 지역여성단체 (대표단체와 25개 자치구를 근거로 한 여성단체 및 여성 모임)들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 컨소시엄 구성
- 서울시 - 여성단체&재단의 '협치' 사업 :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공동 논의 진행

<단체> 각 지역에서의 성인지감수성 입문교육 기획 및 운영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활동을 통한 정책제안 및 자치구, 서울시와의 정책간담회 개최

<재단> 젠더정책연구모임 운영, 지역활동가 교육 및 현장활동 지원
서울시 3개 주요 정책에 대한 성인지 정책 방향 제안
현장활동 지표 및 정책현장활동을 위한 안내서 마련

<서울시> 자치구 및 서울시 사업부서와의 활동 연계, 정책 논의

서울시 및 자치구 풀뿌리여성조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권역	자치구	민간주체
동부	강동구	여성주의문화창작그룹 자갈자갈
	광진구	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
	동대문구	동대문다움
	성동구	한양대반성폭력반성차별 모임 '월담'
서부	강서구	강서여성모임, 강서양천여성의전화
	구로구	더 초록
	금천구	건강한농부협동조합 금천학부모모임
	양천구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영등포구	서울여성회 지부 영등포여성회
남부	강남구	벨류가든
	관악구	관악여성회
	동작구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서초구	나비코치단 / 벨류가든
	송파구	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

북부	강북구	강북여성주의모임 문
	노원구	서울여성회 지부 노원여성회
	도봉구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북구	인권센터 보다
	중랑구	초록상상
중부	마포구	버들바람
	서대문구	너머서
	용산구	용자들
	은평구	정감
	종로구	앤의 친구들
중구	라온마음	

- ✓ 실질적인 거버넌스 실행을 위한 풀뿌리 여성단체 네트워크 구축
- ✓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모색
- ✓ 월1회 네트워크 회의 개최
- ✓ 전반적인 사업목적 및 방향공유,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협치 민관협의체 운영

1. 협치 민관협의체 운영 (총괄거버넌스)

- 구성 : 서울시(젠더정책팀, 협치지원관), 서울YWCA, 풀바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내용 : 공동 사업계획 수립,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 협의 의사결정, 사업평가, 서울시와 자치구연계평가 등
- 횟수 : 월1회 정기회의, 상시회의



2. 지역별/분야별 민관협의체 운영 (지역거버넌스)

- 구성 : 25개 자치구별/ 서울시 사업분야별

풀뿌리여성조직 활동가, 공무원, 연구자 참여

- 내용

- **사전 간담회** : 담당부서와 활동가 인사, 사업방향, 부서협조 논의



- **하루 가다회** : 취약계층 공유, 정책개선안 개발, 민·노·이·하루

2018 젠더거버넌스 활동

서울시 ‘협치’ 사업 : 시민-행정의 공동 사업

25개 지역 여성활동가 모임이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



젠더거버넌스 선포식



활동가 교육 & 워크숍



행정과의 사전 간담회



현장활동 & 정책마련 워크숍



행정과의 성인지정책 간담회



지역 공유회



젠더거버넌스 한마당

젠더거버넌스' 활동 성과

: 의미와 시사점

시민의힘 시민참여 독촉 교육 모니터링 결과 반영되어 현장에서 확인할때의 짜릿함
 관계 연구자 완전짱! 협의 작년에참여했던동료의도움 동료들의 연대 진심
 함께하는동료 시민단체활동가 연대 사람과사람 구청실무자 서로 힘을주는
 민간의격려 팀원 여성단체의지원 우리동네활동이라는 것 화합 활발함
 온몸으로 활동하신 지역활동가 여러분!!! 기관협조 중간지원가 동료 팀워크 구청관계자
 함께활동하는샘들 같이 여성주의교육 관계와신뢰 적극지원
 민간협조 옆파트너 구청 담당자의 적극적지원 적극적참여 행정가들의이해 협력 여성단체의협력
 멘토와의교류 성인지의식향상교육 더불어 모니터링기준제시
 담당공무원 공감 열정 나누는마음 함께 시민단체교육 신뢰 실무자선생님
 여성단체 활동가들 다른시민활동가이지원과격려여성들의연대 고민
 행정의협력 권역별활동가지원 담당공무원협조 함께하는 동료
 디딤돌을 받고, 역량있는활동가 실턴트 주변사람의도움 함께 현장돌아다니며 활동한 것

이제시작이라 모르겠다 소극적협조 정보부족 턱없이부족한시간
 짧은기간 감수성부족 관심부족 느려터진답변 권한나누기 **어려운성인지**
 시간부족 불신 무더위 사람 거부감 실무 촉박한성별영향분석평가기간
 어려운민민협력 고정관념 나자신 **더운계절** 참여 **편견** 공무원들의낯설음
 비공개자료 서류받기 **젠더감수성부족** 행정시스템 **나** 인식변화
 작은실무모임 오해 자치구간담회진행 **무지**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변하지않는 가부장적관점 **여협** 공무원과연락주교받기 노코멘트
 거버넌스이해부족 행정칸막이 **여협** 개별접촉하여설문지들리기 의사소통
 더위와시간 기본정보찾는데도비협조 **제도와의현실의격차** 보고서작성
일부행정의비협조적태도

디딤돌을 딛고, 걸림돌을 헤치며 달려온 2018년

우리는 성장했나요?

우리가 젠더거버넌스 활동의 전문가임을 자각하고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정책에 대해 함께 배우고 나눌 것이다.

“ 정책개선안을 논의하는 협치 과정은
 공무원도, 활동가도
 모두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

(조이다혜 || 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

충분히 소통했나요?

시민과 행정이 함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하며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대화할 것이다.

“ 시민과 행정이,
요구가 있을 때만 ‘협조’하는
수동적인 관계를 넘어
모든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파트너 관계가 되어야 한다 ”

(장우정 ||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성평등의 가치가 확장되었나요?

지역사회에 성평등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의 활동을 시민들과 꾸준히 나누고 우리의 목소리를 더 높일 것이다.

“ 성인지 관점으로 사업을 들여다보는것도
매번 바뀌는 행정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어렵다.
하지만, 끝내고 나면 언제나 보람이 있다.
분명 이 활동을 하며 만난 사람들 중 한 명 짝은
아주 조금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경험을 했으리라 ”

(정숙경 || 정감)

나, 지역, 정책은 얼마나 변화했나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활동이 사회를 바꾸는 씨앗이 된다는 믿음으로 즐겁게 활동할 것이다.

“ 정책제안활동을 할 사업을 직접 선정하고
내가 배운 페미니즘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 사업을 분석하는 경험은
오래 잊지 못할 성취감과
정치적 효능감을 가져다주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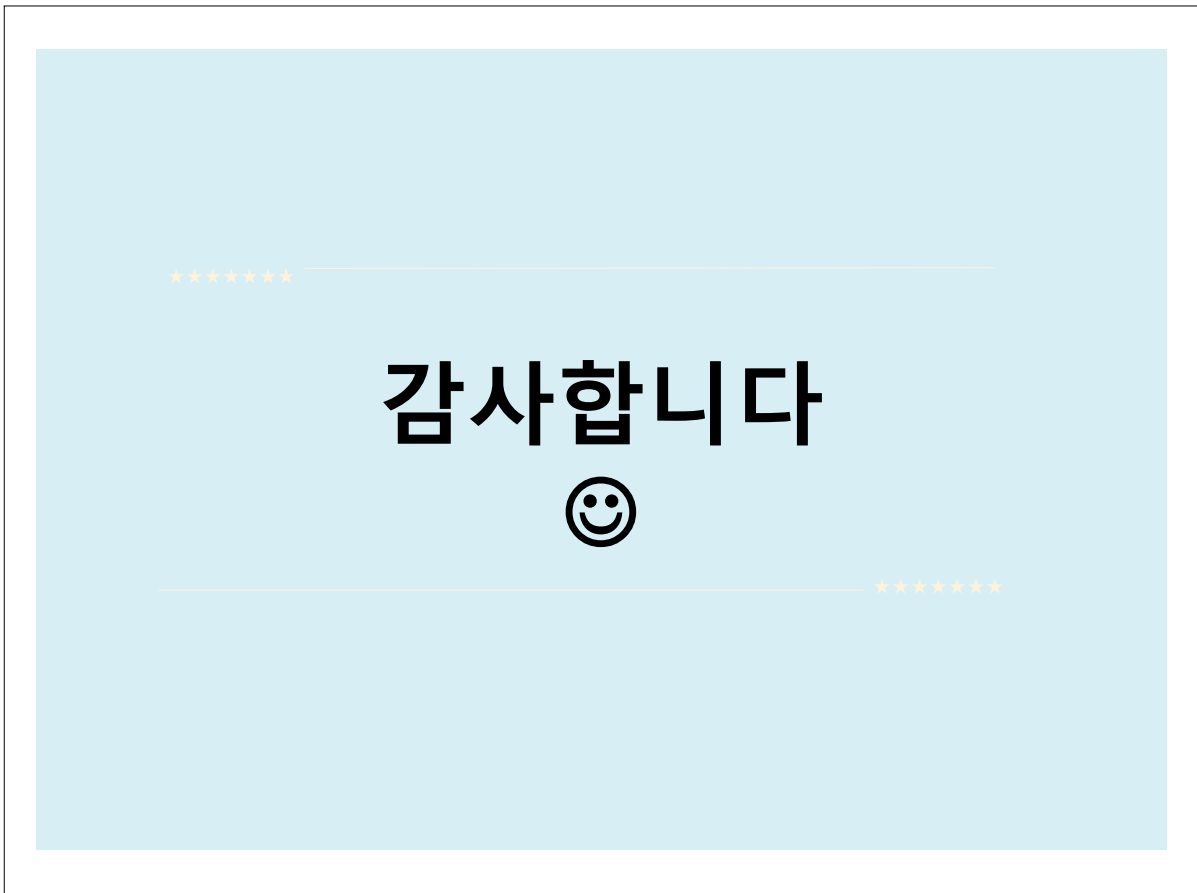
(박지혜 || 한양대반성폭력반성차별모임 월담)

세상이 조금 더 성평등해졌나요?

성평등한 서울을 위해 우리의 삶이 여성주의로 물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내가 경험한 젠더거버넌스는,
지금의 사회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고,
각 삶의 주체들이 더 존중받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다. ”

(앤의친구들)



시민과 함께 협치를 말한다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시민설명회

[협치 우수사례]

마을혁신부문

시흥4동 주민자치회와
시흥4동 행정과의 협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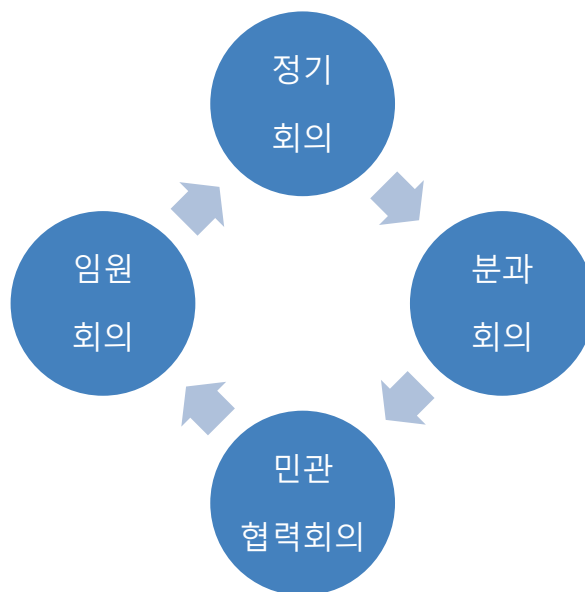
백기성 | 시흥4동 주민자치회장

시흥4동 주민자치회와 시흥4동 행정과의 협치사례



금천구 시흥4동 주민자치회
회장 백기성

회의 체계



회의내용 등

회의명	내용	동행정 참여 정도
민관협력회의 (민관협업회의)	실행논의, 사업기획 행정의 안건 제안	동장, 마을자치팀전원
임원회의	사업계획안 분과에서 제안 안건 논의 정기회의 안건상정	
정기회의	안건심의 동행정보고	동장, 마을자치팀전원 (보고자, 안건심의시 제 도적 자문)
분과회의	각 분과별 공유 정기회의 역할 실행 다음회의 안건 제안	
기타/필요시	- 동장, 회장 - 간사, 지원관, 담당주 무관	동장 또는 담당주무관

협치 예시(사업별)

사업	협의 및 협력 내용
주민총회	6차 준비위: 민관확대회의-기획, 분담, 실행, 평가
학교와 함께 하는 마을축제	7차 준비위: 민관확대회의, 민민네트워크 기획, 역할분담, 실행, 평가
골목길가꾸기	계절꽃 선정 및 심기
의제공유회	지역복지팀원 참여
마을기금	의제개발워크숍, 목표액설정, 의제실행, 모금활동
초록마루	함께 심기, 함께 동네김장 (지역복지팀 참여)
새재미마을활력소	- 활력소운영위원회 (회장, 부회장, 간사 운영위 참여) - 민민네트워크 활발, 마을자치팀 회의참여, 실행지원 - 7개 이상 사업 진행 (마을밥상, 염색봉사, 마을영화관, 에너지교육, 녹색 장터, 마을영화관, 마을관리소 등....)

주 민 총 회



마 을 축 제



시흥4동 협치는...

- 회의에 등장부터, 회장부터 참여, 협업분위기 조성
- 주민자치회가 선 제안, 자기역할 선점한 주도성 발휘, 행정 제도적 검토, 남은 역할분담, 물적자원 연계
- 행정은 보조적 지원, 자문의 역할, 사업실행
- 민간은 행정의 전문성을 인정 및 수용하려는 노력
- 민간에서 발굴 의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민관이 함께 해결노력(동특성화, 시민참여, 구민참여, 각종 공모)
- 서로 신속하게 응답, 민관 서로의 신뢰성

시흥4동 협치로 좋아진 점

- 민관의 자원 확인으로 사업실행시 적절한 자원배분으로 목적달성하기가 쉬움
- 민의 역량을 강화, 행정의 인식변화
- 민의 경험과 훈련으로 책임성 강화
- 생활의 변화 실감으로 동단위 생활자치 확산

문제점/개선점

- 행정의 수직적 체계 안에서 구청장과 동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민관협력(협업)의 수준이 결정
- 민간의 시간과 역량의 부족, 정보의 불균형으로 민관의 수평적 관계의 한계
- 사업 실행시 민간의 잦은 시간 투여로 피로감 누적
- 민간의 느슨한 관계 속에서 책임성, 주민대표성(다양한 그룹과 사회적약자까지 대변), 공익성 담보 노력



시민과 함께 협치를 말하다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시민설명회



[서울시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오수길 | 서울협치협의회 부의장



1. 추진배경

첫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행정기조로서 민관협치의 필요성 증가

- 고령화, 실업, 도시재생, 환경에너지 등 복잡·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민주주의, 속의민주주의 등 과정과 절차가 요구
- 시민사회 영역에서 공공정책 참여 경험의 증가에 따른 시민주도의 시정참여욕구 증가

둘째, 종합적·체계적인 기반마련으로 협치시정의 제도화 필요

- 제도적 기반(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서울협치협의회 구성 등)은 마련되었으나 종합적·체계적 계획은 부재
- 정책과정에서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으로 지속 가능한 협치시정의 확립 필요

2. 추진경과



협치관련 정책수요조사결과(서울연구원)

- **조사기간** : 2017.6.20.~7.14.
- **조사대상** : 공무원, 학계, 직능단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 **조사결과**
 - **협치시정에서 고려해야 할 우선적 요소(2가지 선택)**
 행정과 민간의 협력(75.5%), 정책영역(분야)간 연계와 협력(37.5%)
 일반시민의 참여확대(36.9%) 등
 - **협치시정 실현을 위한 조건(2가지 선택)**
 협치 촉진 제도의 정비(29.4%), 지역사회 주체들의 역량강화(27.1%)
 민관간 속의 공론결과의 정책반영(23.5%), 정책 실행과정에 민간의
 적극적 참여(22.7%)등에 대한 요구가 강력
 - **협치시정의 중장기 비전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가치**
 지속가능성(51.3%), 시민·주민역량강화(27.5%), 시민·주민의 권능 부여(22.0%) 순

3. 서울시 민관협치 운영 현황

1. 시정 주요 제도

가. 시정 평가제도

- BSC 기반 성과평가의 대내외 협력성과 항목으로 협업, 협치성과 평가
 - [협치성과] 보도실적, 소통활동, 외부기관평가, 홈페이지 운영, 정보공개 등의 실적
 - [협업성과] 희망기업 제품구매, 청렴자율준수, 예산신속진행, 성인지 강화 등
 - BSC 기반 성과평가의 결과를 기관 성과급에 반영
 - BSC 성과평가 등을 통해 등급별로 성과포상금 차등 지급
- ※ 개인평가는 BSC 성과평가와 시장단 평가를 합산하여 등급에 따라 성과연봉에 반영

3. 서울시 민관협치 운영 현황

1. 시정 주요 제도

나. 예산제도

- 사업예산제에 기초한 공공주도의 예산편성 추진
 - 실·본부·국(부서)이 개별적으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나 기금을 확보하고 독립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 독립적인 ‘시민참여예산제’ 를 통해 시민의 예산과정 참여기회 확대
 - 2017년부터 참여 예산제의 질적인 성과를 위해 기존 ‘주민참여예산제’ 를 ‘시민참여예산제’ 로 확대·개편하여 시행중(18. 약700억원 규모)



3. 서울시 민관협치 운영 현황

1 시정 주요 제도

다. 정보공개제도

-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정보공개 업무 수행
 - 알권리 보장,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정보 공유
 - 정보공개 정책 및 정보공개 여부 심의·결정을 위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온라인 정보공개 시스템인 '정보소통광장'을 개설하여 행정정보 공개
 - 결재문서 등 행정정보를 청구공개 이전에 사전에 공개하고, 시민이 청구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공개 ※ 2013년 이후 결재문서 공개율 : 81.1%



3. 서울시 민관협치 운영 현황

2 협치선도제도

가. 시민참여제도

- [온라인 기반] 주요 시민참여제도
 -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의 정책화 지속
 - 전자투표 플랫폼인 '엠보팅'을 활용, 다양한 정책 및 제도에 실시간 참여
 - 민원과 제안시스템 '응답소' 운영 및 온라인 청원 채널인 '서울천만인소' 운영
- [오프라인 기반] 주요 시민참여제도
 - '현장시장실' 운영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시민과 소통하며 해결방안 모색
 - 새로운 정책을 민관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토론회' 개최
 - 시정 정책을 공유하고 시민과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정책박람회' 개최



3. 서울시 민관협치 운영 현황

2 협치선도제도

나. 위원회 제도

- 법률·조례 등에 근거한 위원회는 총 194개 설치(17.12월 기준)
 - 위원회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나 권한수준이 낮은 자문·심의 중심 위원회가 대부분
 - 위원 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참여예산 도입에 따라 민간위원 중 시민 사회 소속과 일반시민의 비율 증가
- 위원회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운영 활성화는 아직 미흡
 - 개최 횟수, 회의 출석률 등이 저조한 위원회가 많고 위원회간 운영 실적 등의 편차



3. 서울시 민관협치 운영 현황

2 협치선도제도

다. 민간위탁제도

-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은 수익창출보다는 예산지원형 사업이 대부분
 - 전체 민간위탁사무 중 자체 수익을 통해 운영되는 수익창출형은 8.3% 불과
 - 예산지원형도 서울시 소유 및 임차 시설의 운영 위탁이 대부분 차지
- 민간위탁사업 관리를 위해 지도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실시
 - ‘지도·점검’ 은 주관부서 주도로 연 1회 이상 실시
 [예산, 회계, 조직관리 등의 일반운영분야 점검과 운영성과 점검으로 구성]
 - 5억원 이상의 위탁사무는 조직담당관의 주관 하에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에서 종합성과평가 실시(법령·조례 등에 따른 별도 평가체계가 없는 사무)



3. 서울시 민관협치 운영 현황

3 시정 · 지역 협치기반

가. 시정단위 협치기반 조성

- 민관협치 기본조례 제정(2016.9월)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서울협치협의회 설치·운영 등
- 민관협치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서울협치협의회’, ‘서울협치추진단’ 시·자치구 협력체계 및 민간 협력체계 등
 - ‘진단과 권고 분과’ 를 운영하고 시정에 대한 진단과 권고 시행
- 공무원 · 민간 대상의 협치 교육 프로그램 시행 및 우수사례 공유
 - 협치학교(6개분야) 운영 및 ‘함께서울 공감마당’ 교육 실시(의무교육)
- 민관협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정책토론회 등 소통기회 마련
 - 다양한 의제에 대한 공론장 운영 협치사업 예산반영 ‘협치시정 시민대토론회’ 개최

3. 서울시 민관협치 운영 현황

3 시정 · 지역 협치기반

나. 지역단위 협치기반 조성

- 자치구 협치 기본조례 제정 : 15개 자치구가 공청회 등을 통해 제정 완료
- 자치구 거버넌스 체계(자치구 협치회의) 구축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계획인 ‘지역사회혁신계획’ 시행
 - 계획 수립 · 실행 · 평가의 전 과정에 지역 주체들이 참여
 - 2016. 8개 자치구 → 2017년 7개 자치구 추가참여로 총 15개 자치구 참여
-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네트워크로서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추진
 - 지역사회 주체 역량 강화와 자립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민민, 민관 간의 협력기반 마련
 - 10개 자치구가 선정되어 연간 1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최대 3년간 지원



4. 진단 및 과제

● 다양한 시정제도의 협치친화적 개선 노력 부족

- 위원회, 주민참여예산, 민간위탁, 청책토론회 등 협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주도로 이루어지는 한계

기존 협치 제도인 위원회, 민간위탁, 참여예산, 평가제도 등을 개선하여 협치친화적 제도 및 추진체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참여 프로세스는 보다 체계화·고도화 하여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협치시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협치의 형식화 우려 상존

- 협치 기본조례 제정 및 서울협치협의회 구성·운영 등 근거는 마련

부서 간 협업을 넘어, 협치시정의 기조로 융합행정 구축 필요
수평적 관계지향, 책무성 등을 강조하는 제도적 환경으로 전환

4. 진단 및 과제

● 지역단위 협치프로세스에 대한 인식·경험 부족

- 자치구의 경우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단위의 협치기반을 구축하고 협치 사업을 추진 중이나 협치에 대한 인식·경험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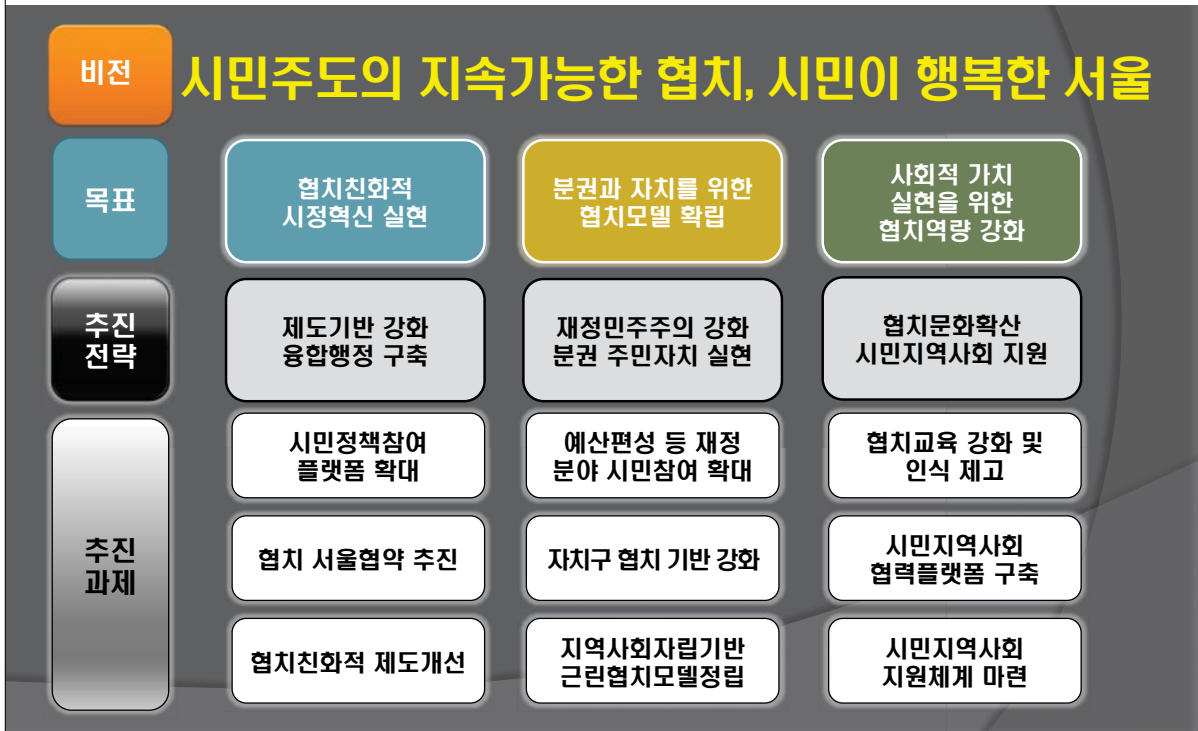
지역협치를 선도·활성화하는 제도·기반 강화 및 다양한 지원 등 지속가능한 협력적·자립적 네트워크 필요

● 협치역량 부족 및 민관의 상호 인식차 존재

- 시민의 실질적 참여와 권한, 협치에 대한 경험 부족 및 민관의 상호 인식차가 존재

교육 및 소통, 교류의 장 마련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시민사회의 다양성 확대와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5. 민관협치 활성화 비전 및 전략



5. 민관협치 활성화 비전 및 전략

1. 협치 친화적 시정역신 실현 제도 · 기반강화 융합행정구축

1-1. 시민정책참여 플랫폼 확대

가. 민주주의의 서울 플랫폼 기반 ‘온라인 시민 공론장’ 활성화

-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정부 모델로 ‘민주주의의 서울’ 확장 및 활성화
- 단순 정책제안에서 숙의·공론, 결정, 실행단계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세스로 확대(핵심 정책 수립시 시민 의견수렴, 숙의·공론 등)

나. 민관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 쌍방향 정보공개 체계 구축 및 공공데이터의 접근성·활용성 제고
- 일반시민들도 쉽게 공공 데이터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채널 및 제공방식 다양화
- 공공 빅데이터 및 민간공유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제공하여 연구·분석 및 정책자료로 활용 확대



5. 민관협치 활성화 비전 및 전략

1. 협치 친화적 시정혁신 실현 **제도 · 기반강화 융합행정구축**

1-2. 협치서울협약 검토

- 다양한 정책주체들이 상호 신뢰와 수평적 관계에 기반한 정책파트너십을 모색하고자 약속하는 사회적 협약 체결 모색
- 행정-의회-시민/지역사회의 다자간 사회 협약 체결
- 협치관련 제도 및 사업 등 주요 정책의제를 대상으로 한 협약 체결
- 사회 협약에 주체별 권한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이행계획 수립 및 관리



5. 민관협치 활성화 비전 및 전략

1. 협치 친화적 시정혁신 실현 **제도 · 기반강화 융합행정구축**

1-3. 협치친화적 제도개선

가. 위원회 제도 혁신

- 시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주요 위원회 대상으로 ‘시민참여형 위원회’ 운영
- 참여 희망 시민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위원회 학교 기획 · 운영

나. 민간위탁제도 개선

-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파트너십 기반의 민간위탁제도로 전환
- 선정, 운영 및 평가체계 등 민간위탁 과정 전반의 혁신방안 모색

* 사업자 진입장벽 철폐, 사무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 마련

5. 민관협치 활성화 비전 및 전략

1. 협치 친화적 시정혁신 실현 **제도 · 기반강화 융합행정구축**

1-3. 협치친화적 제도개선

다. 협치역량평가제도 도입 · 운영



- 성과중심의 시정평가체계 → 성과기반 평가와 협치역량 평가체계가 융합된

협치역량평가제도 운영

- '서울형 협치평가 지표' 개발 및 협치 평가에 개방형 참여형 평가프로세스 확대
- 협치친화형 평가제도의 계획수립, 평가지침 개발, 시민참여형 평가단 구성 · 운영, 평가결과 도출 및 결과의 활용 담당

5. 민관협치 활성화 비전 및 전략

2. 분권과 자치를 위한 협치모델 확립 **재정민주주의 강화, 분권 · 주민자치 실현**

2-1. 예산편성 등 재정분야 시민참여 확대

가. 재정거버넌스 실행지원체계 강화

- 예산운용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재정 모니터링 및 재정진단체계 강화
-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에 주요내용을 반영(민관협치활성화 조례, 시민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나. 민관예산협의회의 재구조화

- 현재 참여예산(시정참여형과 시정협치형)에 한정된 민관예산 협의 절차를 실질화 · 내실화
- 영역별 또는 부서별로 사업예산 편성과정에서 행정과 민간간 예산협의 내실화



5. 민관협치 활성화 비전 및 전략

2. 분권과 자치를 위한 협치모델 확립 **재정민주주의 강화, 분권 · 주민자치 실현**

2-2. 자치구 협치기반 강화

가. 지역사회협치를 선도 · 활성화하는 제도기반 조성 및 추진체계 고도화

- 자치구별 민관협치 기본조례 제정의 적극적 유도 및 확대
- 자치구별 협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협치 환경 조성



나. 지역사회 단위 협치계획의 확산 및 내실화

- 지역사회혁신계획을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고, 사업 규모(예산)를 대폭 확충

다. 통합예산제 구축을 통한 자치구 단위 통합적 협치계획 수립 지원

- 자치구 다양한 혁신사업의 예산을 통합예산제로 구축함으로써 자치구 권한 강화

라. 정기적인 지역 공론장의 운영을 통해 상시적인 주민 참여 구조 마련

- 자치구별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정기적 · 상시적 지역 공론장 운영

5. 민관협치 활성화 비전 및 전략

2. 분권과 자치를 위한 협치모델 확립 **재정민주주의 강화, 분권 · 주민자치 실현**

2-3. 지역사회자립기반 근린 협치모델 정립

가. 주민자치회를 동단위 주민의 실질적인 대표기구로 시범시행 및 확대검토

나. 근린 단위에서 다양한 주체의 연계 촉진

- 지역사회 근린 기반의 다양한 활동 주체간의 원활한 연계를 촉진

※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소상공인 활성화 등

다. 동단위(근린) 계획과 구단위 계획의 유기적인 연계 도모

- 동단위(마을, 주민자치회 등) 활동 주체들과 구단위(협치회의 등) 활동 주체의 정기적인 소통 구조 마련을 통한 협력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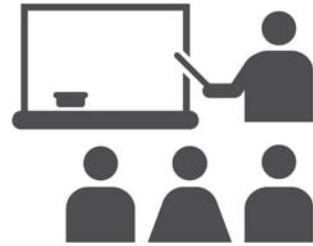
5. 민관협치 활성화 비전 및 전략

3.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협치역량 강화 **협치문화 확산 및 시민·지역사회 지원**

3-1. 협치교육 강화 및 인식제고(시민력과 협치기본 역량 향상)

가. 서울협치학교 기반 조성

- 협치학교 전담 공간 조성 및 강사 인프라구축
- 협치시정 고도화를 위한 협치교육 교과과정 운영
- 대상별 단계별 협치교육 교보재 개발



나. 협치교육 확산 및 네트워크 구축

- 서울 시정, 자치구 시민민주주의 교육 네트워크 운영(협치교육대회 개최)
- 협치사례 발굴, 아카이브를 통한 전국 최초 디지털 **‘협치도서관’** 운영

다. 서울협치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 **‘협치서울 박람회’** 및 협치의제 발굴 등을 위한 **‘협치서울 정책포럼’** 운영
- **‘협치리더’** 시상 및 모범사례 확산을 위한 **‘서울협치백서’** 발간

5. 민관협치 활성화 비전 및 전략

3.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협치역량 강화 **협치문화 확산 및 시민·지역사회 지원**

3-2. 시민·지역사회 협력 플랫폼 구축

가. 공익활동 거점공간 조성 및 활성화

- 공익활동 민간단체 입주·협업 공간 확충으로
민간단체 운영비 부담 완화 및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 정책금융 지원 등 시민사회 수요 맞춤형 운영 계획 수립



나. 근린 공익활동 공간 **‘우리마을 활력공간’** 조성 및 운영

- 마을공동체 소통공간 및 자치구 마을공간들의 거점 역할(자치구별 3개소)
- 복합형 또는 마을자산형(공유지형, 매입형)의 형태로 조성
- 민간위탁 또는 주민자율운영 형태 → 마을공동체, 지역NPO, 자원봉사, 도시재생 등
다양한 지역주체의 의제 활동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



5. 민관협치 활성화 비전 및 전략

3.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협치역량 강화 **협치문화 확산 및 시민·지역사회 지원**

다. 협치 시민력 육성 전략 수립 및 협력기반 조성 지원



- 서울시 NPO 시민사회 관계자, 전문가 등이 중심이 된 지역·시민사회 육성 TFT를 구성
- TFT의 주관을 통해 실태 조사의 기획 및 감수, 공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육성 전략 수립
- 광역 단위 시민사회단체 간의 연계, 협력을 위한 ‘시민넷’ (가칭) 구축
- 시민넷 보조 및 시민사회단체 소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
- 지역 시민사회 현장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지원 실시

5. 민관협치 활성화 비전 및 전략

3.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협치역량 강화 **협치문화 확산 및 시민·지역사회 지원**

3-3. 시민지역사회 지원체계 마련

- 권역 NPO지원센터 추가 조성 및 자치구 NPO지원 확대
 - 「공익활동촉진조례」 개정으로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NPO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으로 생활권 단위 공익활동·NPO 역량강화 지원
 - 지역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 강화
 - ※ 동북권 NPO지원센터(18.6 노원·도봉·강북·성북·중랑) 성과를 다른 권역으로 확대
 - 자치구 NPO지원센터 지원 필요시 서울시 NPO지원센터와 연계 컨설팅 등 역량강화 및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등 지원 추진



질의 응답

감사합니다